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09

2020. 12. 24

www.nafi.re.kr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 성 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김 유 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0. 12. 24

Vol. 09

ISSN 2733-8258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김유빈

I. 서론: 데이터와 연구방법

II.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변화

III. 정책적 시사점

IV. 결론: 돌파구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 ▶ 국회미래연구원은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가장 많은 학술저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COPUS DB(사회과학분야)를 활용했다. 시기는 2000년 이후로 한정해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어떤 사회적 변화가 관찰되었는지 학자들의 시각을 분석했다.
- ▶ 시기별로 특징적인 이슈를 꼽아보면, 사스 시기에는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회복력,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 심리적 변화도 거론되었다. 신종플루 시기에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감염병 확산의 과학적 분석이 집중 거론되었고, 감염병의 발발 원인이 되는 동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논의되었다. 메르스 시기에는 시민과 정부의 협력,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이 관찰되었다. 정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시민들의 협력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 ▶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전례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급진적인 사회재정 정책, 불평등 확대,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기, 지역폐쇄, 우울증, 가정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이종간 교류 등 매우 다양한 변화를 내포하는 단어들이 포착되었다.
- ▶ 2000년대 들어 4번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급변의 상황에 취약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정부에 대한 불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취약한 국제사회 공조,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으로 환경파괴와 지지부진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I. 서론: 데이터와 연구방법

코로나19가 발발한지 꼭 1년이 되었다. 전례없는 변화에 전세계가 경악했고 감염병의 빠른 확산세로 많은 사람이 심하게 앓고 있거나 목숨을 잃었다(2020년12월15일 현재 전세계 확진자 7,314만명, 사망자 162만명). 각국의 경제적 피해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컸고, 그에 따라 사회적 불안도 심각하다(OECD,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2%; 복지부, 국내 20대 여성 자살율 전년대비 25% 증가).

인류는 그동안 이같은 쇼크(shock)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을까. 시기를 최근 20년으로 한정하고, 세계적 감염병이 창궐한 이후 어떤 사회적 변화가 관찰되었는지 조사했다. 2000년대 들어 세계는 4번의 세계적 감염병을 경험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이하 H1N1),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이다.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가장 많은 학술저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COPUS DB를 활용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각 감염병 이름을 넣고, 사회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키워드로 영향과 충격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influence, impact, effect를 포함하는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2002년 사스 이후 전세계에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를 보기 위해 검색식에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의 전체 영어 이름과 'Influence or Impact or Effect'를 넣고 2008년까지 이 검색식에 걸린 문헌들을 취합했다. 2008년까지로 한정한 이유는 2009년 H1N1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같은 방법으로 H1N1의 사회적 변화는 2009년부터 메르스가 창궐하기 직전 해인 2014년까지 나타난 문헌을 수집했다(메르스는 2012년 중동에서 발생했지만 한국 등으로 확산된 해는 2015년).

[표 1] SCOPUS 사회과학분야 DB에서 수집한 세계적 감염병 관련 문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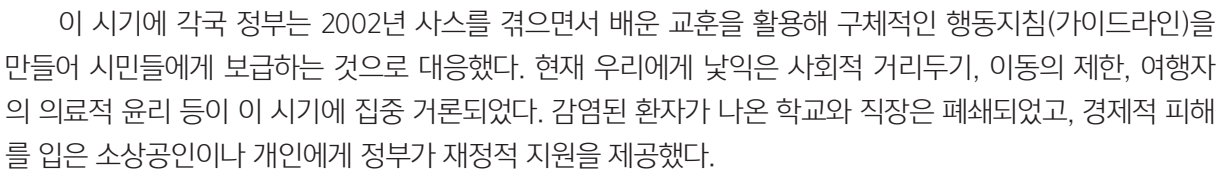
	사스	H1N1	메르스	코로나19
분석 문헌수	80건	142건	23건	1864건

감염병의 사회적 영향을 시기별로 나누었더니 사스 관련 논문은 80편, H1N1은 142편, 메르스는 23편, 코로나19는 지난 11월까지 1864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SCOPUS에서 의학, 보건학,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함했으면 더 많은 논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회과학분야 논문으로만 한정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경우 1800편이 넘는 논문이 검색되어 분석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수집된 논문의 제목, 키워드, 요약문을 대상으로 토픽분석을 해보았다. 토픽별로 어떤 단어가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지 단어별 네트워크를 그려보았다. 특히, 코로나19는 문헌의 수가 많아 구체적인 키워드 분석이 필요했다. 이에 토픽 네트워크 뿐 아니라 논문 인덱스(index) 키워드의 네트워크 분석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어떤 변화가 서로 맞물려 일어났는지를 파악해보았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던 2009년 H1N1 이후 사회변화를 살펴보았다(그림2 참조). 앞서 사스 때와 달리 새로운 단어들이 눈에 띈다. 우선 정부와 정책은 사스에서도 봤지만 공동체라는 단어가 새로 연결되어 하나의 토픽을 형성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와 공동체가 합심해서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공조, 시민사회나 비정부기구와 협력, 기업들의 협조는 필수적이다(Ekici et. al., 2014).

[그림 2] H1N1 이후 토픽 네트워크 및 주요 키워드



미국 정부는 더 나아가 국토방위부에 국가 바이오포렌식 분석센터(National Bioforensic Analysis

Center)를, 국방부에는 세계적 감염병 감시와 대응 시스템(Global Emerging Infections Surveillance & Response System)을 설립해 생물감시와 바이오 테러리스트를 연동해서 관찰하는 기구를 운영한다(박성원, 김유빈, 2020). 인수공통 감염병의 빈발에 따라 이를 테러에 악용하는 시도를 감시하려는 시스템이 더욱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 메르스 이후 사회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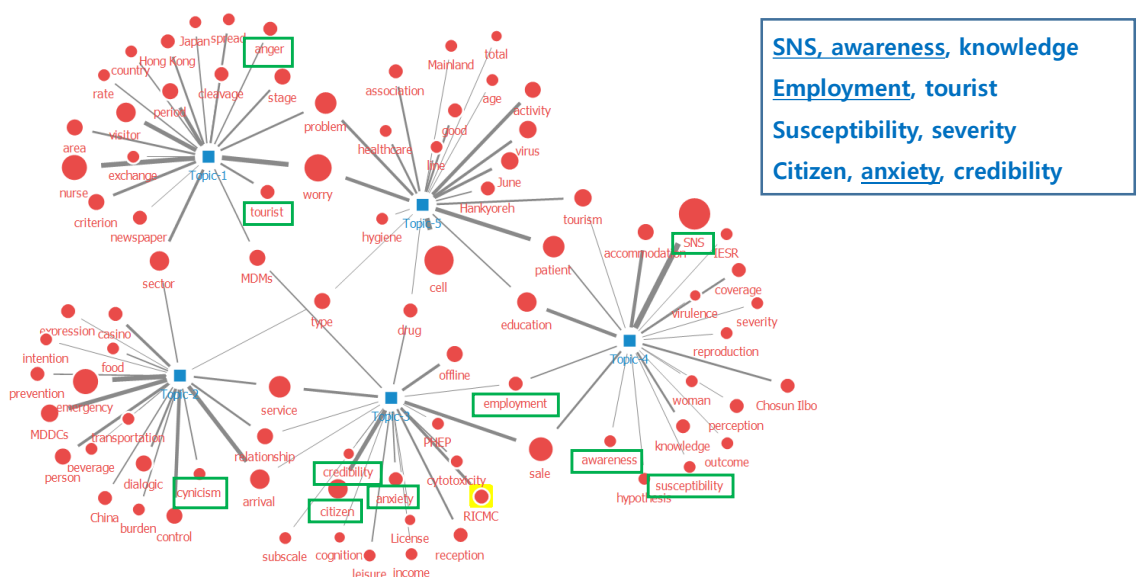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발했지만, 2015년 한국에서 유독 유행한 메르스를 살펴보았다. 메르스 관련 논문 수는 다른 감염병 관련 논문과 비교해 적었으나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그림3 참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셜네트워크(SNS)였다. 스마트폰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확진자 관련 정보, 메르스에 대한 의학적 정보 등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수많은 시민 저널리스트가 위기의 상황에서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했다(Kang et. al., 2018). 온라인 정보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루머도 많이 돌았다. 당시 한국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실정이 크게 비난받기도 했다.

또 하나 메르스 시기에 발견되는 특징은 시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가 초기에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전염병을 확산시켰다. 한국 정부는 감염병의 대응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할 때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대유행 감염병은 ‘사회적 질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감염병의 백신, 치료제 개발 뿐 아니라,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는 정부의 각종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림 3] 메르스 이후 토픽 네트워크 및 주요 키워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살펴보았다. 1800여편의 논문이 사회과학분야에서만 나왔으니 다른 분야까지 더한다면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이전 시기의 문헌과 양적으로만 비교해도 이 시기의 문헌이 폭증했음이 눈에 띈다. 그만큼 감염병의 사회적 충격이 이전의 감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토픽 네트워크 분석으로는 1800편이 넘는 논문에서 보여주는 풍부한 사회적 변화의 이슈를 담기 어렵다고 판단, 저널에서 부여한 인덱스(index) 키워드를 활용해 상세히 분석해보았다(그림4 참조). 이를 통해 토픽 네트워크에서 찾기 힘든 단어들의 연결성을 찾았다.

또 다른 큰 허브는 지역폐쇄(lockdown)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모인 것이었고, 이는 스트레스, 우울감, 정신건강, 회복력이라는 단어들과 연결되었다. 지역폐쇄는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민에게 정신적 불안감, 우울감을 준다. 지역폐쇄와 연결되어 주목되는 단어는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지역폐쇄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자,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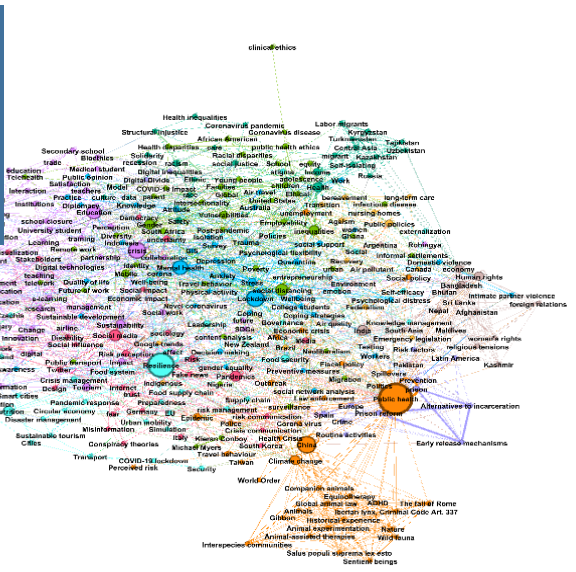
Public health, economic crisis, social/fiscal policy

Lockdown, domestic violence, mental health, resilience

Education, distance learning, digital transformation

Climate change, global animal law, interspecies comm.

Racism, bioethics, structural injustice



교육이라는 단어도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요한 허브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원격 교육을 받고 있다. 의료도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전환이 사회변화의 주요 동력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매우 급진적으로 이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각종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의사소통 방식은 코로나19 이후 경험한 주요 사회변화다.

또 하나 주목되는 허브는 기후변화, 국제동물법, 이종간(interspecies) 커뮤니티 등이 연결된 것이다. 기후변화와 인수공통감염의 연결고리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한데 묶인 것으로 분석된다. 야생동물에게서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은 인류가 도시화를 확대하면서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국제동물보호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발생원인을 동물 학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Giménez-Candela, 2020). 인간은 동물을 식량으로, 노동의 수단으로, 연구실험용으로, 반려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숭한 동물학대와 잘못된 유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각 나라에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Peters, 2020).

코로나19 이후 목격되는 사회변화에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현상은 인종차별이다. 키워드 네트워크 상에서는 사회구조적 부정의(injustice), 불합리, 생명윤리 등과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정책적 시사점

3-1. 공통적 사회변화 이슈

2002년 사스 이후 시기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로는 경제적 충격, 심리적 불안,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사스나 코로나19처럼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환경파괴를 들 수 있다(그림5 참조).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이슈는 혁신적 대응이 필요하다. 문제를 풀지 않고 덮어 두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무분별한 도시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환경 오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세계적 감염병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화여대 생태학자 최재천은 화학백신이나 행동백신(사회적 거리두기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려면 생태백신(환경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최재천 외, 2020).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된 미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나라가 경제 회복을 이유로 더 혹독하게 생산 시설을 가동할 경우 다시 기후변화나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신변종 감염병의 등장과 확산을 부추기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감염병 억제를 위한 엄격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climate-neutral, 온실가스 배출 제로)을 달성하겠다고 녹색, 디지털 그리고 공정의 유럽을 기치로 내세웠다(European Commission, 2020). 한국 정부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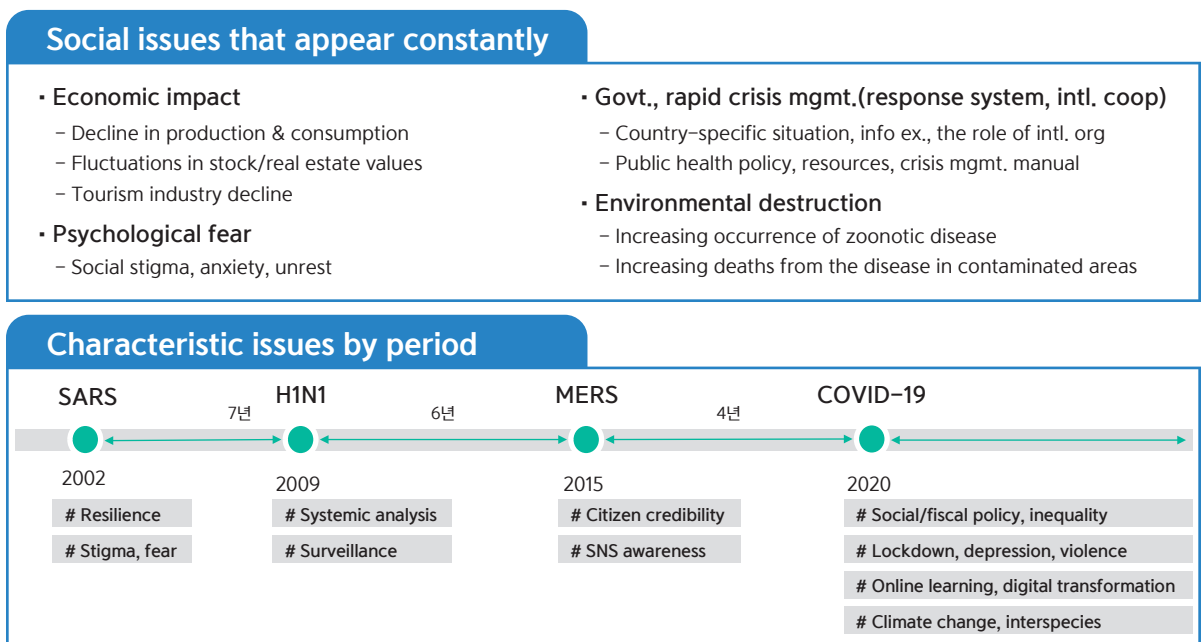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를 묶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이 모든 노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속화되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감염병 창궐 이후 보건 의료, 경제와 사회적 문제, 방역 등은 한 몸을 이뤄 복합적인 문제를 양산한다.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경제에는 치명적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는 더 고통 받는다. 감염병의 확산세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없다. 사회적 안전을 우선 고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는 필요한 의료진과 의료 자원을 확보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빨리 움직이려면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 세계적 감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될 때, 정부가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범국가차원의 위기관리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박성원, 김유빈, 2020). 예를 들어 정부간 협력으로 감염병의 발생에 원인이 되는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전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이상징후를 분석하며, 그 결과 경고성 징후로 확인되면 대처 방안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정신적 문제, 트라우마, 피로감 등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니 일상이 불안하고, 불안이 가중되면 분노가 치민다. 분노가 누적되지만 풀 방법이 마땅치 않을 때 우울로 발전한다.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경계해야 한다. 연세대 문화인류학 서보경은 “메르스 때나 지금이나 ‘청정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정공간이 오염되면 사람들은 오염시킨 사람을 배제한다”며 “낙인과 차별을 조장하는 이 단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변진경, 2020).

[그림 5]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변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경제적 충격은 다양하고 다층적이어서 수많은 문제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가 아직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문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취업 변화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의 문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 학력별로 위기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 이미 한국은 대졸자가 자신의 능력을 낮춰 취업하는 하향취업의 추세가 뚜렷하다. 2019년 한국은행이 펴낸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을 보면, 2000년대 들어 대졸자의 하향취업률이 꾸준히 증가했다(오삼일, 강달현, 2019). 하향취업자 중 85.6%가 1년 후에도 하향취업 상태(대졸 학위가 필요 없는 매장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수급의 문제로 잡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 인적자본의 비효율적 활용이 사회적 문제라면,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의 하락, 임금손실 등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향취업한 청년들의 경우 자신의 일자리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그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결국 하향취업한 곳에서 이들의 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그 일자리에 적합한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셈이 된다(박성원, 2020).

3-2. 최근 등장한 사회변화 이슈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머징 이슈들은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까지 감시하는 생물감시 체계는 조만간 각국별로 또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생물감시체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근접감시(over the skin)에서 밀착감시(under the skin)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감시체계는 비상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상의 감시체계에 들어가고 있음을 주장한다(Harari, 2020; 박성원 2020에서 재인용).

아울러 공공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제약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인도 경찰은 사회적 격리를 따르지 않는 시민에게 구타를 가했고, 이런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서 회자되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대응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개인의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으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은 의료행위와 교육이 어떤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다.

온라인으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WHO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인포데믹으로 정의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텐데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루머가 확산될 수도 있다. 2003년 나이지리아에 소아마비 백신 관련한 루머가 돌아 11개월 동안 접종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20여개국에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확산된 바 있다. 당시 루머는 미국이 이슬람권 인종을 멸종시킬 목적으로 소아마비 백신에 불임의 기능을 넣었다는 것이었다(Larson, 2020). 2010년부터 백신과 루머를 연구한 Larson(2020)은 사회에 신뢰가 무너질 때 루머가 양산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급변의 시기를 이겨내려면,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IV. 결론: 돌파구는 무엇인가

2000년 이후 어떤 사회적 변화가 세계적 감염병과 연관되어 나타났는지 학술논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특징적인 이슈를 꼽아보면, 사스 시기에는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회복력,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 심리적 변화도 거론되었다. 신종플루 시기에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 분석이 집중 거론되었고, 감염병의 발발 원인이 되는 동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논의되었다. 메르스 시기에는 시민과 정부의 협력,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이 관찰되었다. 정부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시민사회의 협력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전례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인했다. 급진적인 사회재정 정책, 불평등 확대,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기, 지역폐쇄, 우울증, 가정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이종간 교류 등 매우 다양한 변화를 내포하는 단어들이 포착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돌파구는 무엇일까. 가장 기대를 걸어야 하는 분야는 과학기술일 것 같다. H1N1 이후 과학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병 억제에 노력했다. 한국 정부는 메르스 이후 빅데이터 기반의 감염병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후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유행처럼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또한 감염병의 진단, 치료, 백신까지 신속하게 개발하고 전 세계에 확산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증거에 기반하고,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또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사회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의도했던 효과가 나고 있는지 수시로 미세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민간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규제에 잘 따르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One in, One out’의 원칙을 적용, 하나의 규제를 제안하면 기존의 규제 하나는 폐지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새로운 규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결국, 필요한 규제를 통해 미래를 더욱 잘 준비하고, 시민의 삶은 더 편해진다는 대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성원. (2020.7.17.).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전망에 필요한 10가지 질문. 월간중앙.
- 2) 박성원, 김유빈. (2020).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적 이슈. 동향과 전망, 109호, 35~67.
- 3) 변진경. (2020.5.26.). 확진도 무섭지만 낙인은 더 무서워. 시사인.
- 4) 오삼일, 강달현. (2019.12.20.).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 BOK이슈노트, 1~9. 한국은행.
- 5) 최재천 외. (2020). 코로나 사피엔스. 인플루엔셜.
- 6) Ekici A., Keskinocak P., Swann J.L. (2014). Modeling influenza pandemic and planning food distribution. Manufacturing and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16(1): 11~27.
- 7) European Commission. (2020). Charting the Course Towards A More Resilient Europe. 2020 Strategic Foresight Report.
- 8) Giménez-Candela, M. (2020). The collapse of the past: Covid-19. Derecho Animal, 11(2). <https://doi.org/10.5565/rev/da.507>
- 9) Harari, Y. (2020.03.20.).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 10) Kang M., Kim J.R., Cha H. (2018). From concerned citizens to activists: a case study of 2015 South Korean MERS outbreak and the role of dialogic government communication and citizens' emotions on public activism.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30: 202~229.
- 11) Kwek S.-K., Chew W.-M., Ong K.-C., Ng A.W.-K., Lee L.S.-U., Kaw G., Leow M.K.-S. (2006).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status in survivor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at 3 months postdischarg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0(5): 513~519.
- 12) Larson, H. (2020). Why rumors about vaccines spread and how to rebuild trust. TED 강연.
- 13) Lu Y.-C., Shu B.-C., Chang Y.-Y., Lung F.-W. (2006). The mental health of hospital workers dealing with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75(6): 370~375.
- 14) Parry, B. (2012). Domesticating biosurveillance: 'containment' and the politics of bioinformation. Health Place, 18(4): 715~725.
- 15) Peters, A. (2020). Global Animal Law. Max Planck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2.10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